

다산포럼

풍수지리학의 인문적 이해



박진 상지대 명예교수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그친다. 그래서 풍수라 한다.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故謂之風水) 인간이 우주에 가득한 기(氣)를 받으려는 것이 풍수사상의 골격이다. 기가 많은 곳에 양택(陽宅: 집)을 짓거나 조상을 모시면(陰宅: 산소) 땅의 기운을 받아 복을 누린다는 기복적 요소가 배어 있다. 그런데 그 인과(因果)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 결과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풍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뉘, 예측과 맞으면 믿음에 되고, 아니면 영터 리 술법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풍수가 역사의 현장을 지켜 온 까닭은 무엇일까? 풍수지리설의 이론들을 정리해 보자.

풍수사상의 중심은 기론(氣論)이다. 기는 천지 만물의 존재와 움직임의 근원적 법칙이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자연 변화의 신호인 천동·바람·눈·비 등은 이 기의 변화 때문이라 여겼고, 천지에 가득한 기를 흡수하지는 게 이 논리의 뼈대이다. 그렇다면 천지에 가득한 기나 사람의 몸속의 기는 같을까. 같다면 왜 서로

소통·교류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천지 만물과 다르다고 믿는 자의식(自意識)이 그 소통을 막기 때문이라 한다. 이른바 신선술(神仙術)이나 좌선(坐禪)은 그 자의식을 없애는 수련이라 한다.

양택(陽宅)의 경우 기가 모인 곳에 집을 지어야 땅 기운을 받는다. 인간은 잠잘 때 자의식이 가장 약해지는데, 지기가 가장 잘 흡수된다고 말한다. 가장 말이 많은 곳이 묘자리 잡기이다. 죽은 사람이 받은 기가 산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같은 기는 반응한다'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이 그 답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 문제를 염려한 정치가 풍수설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소주길흉론(所主吉凶論) 아날까 싶다. 이는 자칫 풍수설에서 일어날 맹목적인 기복(祈禱) 행위를 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풍수설에서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의 글귀가 보이는데, 명혈(名穴)과 길지(吉地)는 선행으로 덕을 쌓아야 내 것이 된다는 경책이다.

기가 모여 있는 산을 찾는 이론이 형곡론(形窟論)이다. 그런데 저 산이 왜 길지인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배운 대로 산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림 산을 어떻게 구별해 날까? 사람·짐승·나무 등에 견주어 그 모양을 유추하면 그 지세의 가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산은 땅의 기운이 통로이다. 산을 용(龍)에 비유하는 이유이다. 땅의 기운이 이어지는지, 병들거나 죽은 용의 모습인지, 생기를 머금은 산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간룡법(看龍法)이다.

기가 집중된 곳 혈처를 찾으려 할 때 그 범위가 의외로 넓게 보인다. 이때 명당 주변의 지세를 살펴 판별하는 이론이 장풍법(藏風法)과 득수법(得水法)이다. 용이 물을 만나면 거둔 길을 멈춘다. 용이 멈춘 곳에 혈이 있고 기는 그 특정 지점에 모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웅만한 산에는 거의 물이 있어 장풍은 득수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된다. 물은 반드시 길(吉)한 방향에서 흘러와 흥(凶)한 방향으로 흘러야 하고, 악취가 나거나 탁해서도 안 되며, 혈처를 감아 부드럽게 흘러야 한다. 골개 치달리는 물은 흥한 땅으로 여겼다.

장풍과 득수가 갖추어졌다면 명당은 결정될 셈이다. 이제 기가 모인 혈처를 찾는 것이 안혈법(安穴法)이다. 양택은 거주자가 주거하는 특정 지점이고, 음택은 시신이 직접 땅에 닿아 생기를 얻는 곳이다. 마치 집술에서 경락을 찾고 혈의 자리를 알아 시술하는 이치와 같다. 끝으로 방위에 관련된 이론이 있다. 명당을 잡은 뒤 주변의 형국을 살펴 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좌향론(坐向論)이다.

왜 풍수설인가? 이를 화두로 잡고 우리 전통에 녹은 풍수사상, 그것의 이론적 흐름을 짚어 보려 했다. 설득력이 약한 논리와 기복적 요소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기복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겨내 인간과 자연에 대한 통합적 사고, 즉 인간과 자연이 공동운명체이며 유기체적인 통합의 산물이라는 일깨움을 얻는다면 그 성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NGO 칼럼

핵발전,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 03일 12시 07분 경에 한빛 2호기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하였습니다. 현재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부 영향은 없습니다.” 지난 3일 지역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미건조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이 문자는 큰 일이 아닌 사건이 있었지만, 외부 영향은 없고 조치 중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단순 통보 사항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나 심의·논의 사항이 아닌 단순 통보 사항으로 공지되지만,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AOO(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 예상 운전 과도)라고 해서, 안전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원전 기술은 많은 부분이 미국에 있다. 또한 상당 부분은 미국 기술과 매뉴얼을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안전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에는 한빛 5호기 부실시공 및 은폐 문제가 드

러났다. 문제는 적발이 아닌 공익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는 점이다. 하청업체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적 시험을 대신 봐 주고, 무자격자한테 작업을 맡기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 제품으로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것이 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좀체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은 한수원이 부실시공에 대한 확인을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맡긴 것이다. 결과 역시 예상대로 부실시공 내용이 은폐되었다. 부실시공한 업체에 부실시공 자재를 맡긴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보고서를 딱 믿어준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이란 말인가?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수사과정까지 이어져 당시 작업을 한 한수원, 두산중공업, 하청업체 관계자 8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핵발전소 문제도 적지 않다. 안전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번 회자되었던 월성핵발전소에서 최근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인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이 오랫동안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핵발전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성과 기술적인 면에서 최고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핵발전소에 대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소형 모듈 원전'(Small Modular Reactor)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SMR은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이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하다.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송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

친핵발전 그룹은 SMR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영구 서섹스 대학교 벤자민 소바콜 교수가 2008년 펴낸 논문에 따르면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66g/kWh이다. 태양광(32g)보다 2배 이상 많고 풍력(9.5g)보다는 7배 정도 많다.

이는 SMR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같은 발전 용량이라면 소규모로 다량의 원자로를 만들어 내는 SMR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SMR이 분산형 전원을 표방하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발전 현장이 많아 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SMR은 안전 부분에서 검증해야 할 내용이 많고, 상용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상에만 존재하고, 안전·비용·경제성 문제가 미지수인 SMR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SMR도 또 다른 형태의 핵발전소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SMR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SMR은 안전과 비용으로 궁지에 몰린 친핵발전 그룹의 품수에 지나지 않는다.

기고

골프장 폭리·갑질, 정부가 강력히 제재해야



장세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외인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골프업계다. 골프장은 소규모 야외 스포츠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새롭게 골프에 입문하는 이른바 '골린이'(골프를 처음 하는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 신조어)가 크게 늘고,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인원 규정을 지키면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골프 활동 인구가 이미 515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의 여행길이 막힌 상황 또한 국내 골프장으로서의 설립 현상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7년의 한 해 해외 골프 활동 인구가 약 21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해외로 나가지 못해 국내로 유턴한 골퍼들의 수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

게 초호화를 누리며 '부킹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들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배짱 영업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8.7%, 주말에는 14.7%가 올랐고, 배터리 교체비용에 소모되지 않은 카드 비용도 두 배까지 올랐다.

골프장 내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 한 병이 1만 2000원, 맥북이는 3만 5000원을 받는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고, 지난해 감면된 세금 총액은 약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은 쟁길 대로 쟁길고 각종 요금은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해 이중으로 골프장 사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무시하고 비회

원과 단체팀을 받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제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회원 가격을 취소하는 등 편법 운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골프장의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골프장 대상 세무조사 강화, 팀 간 티업 시간(7분) 준수, 캐디 인권 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공평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만큼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골프업계에서도 코로나 호황을 마냥 즐길 것이 아니라 빨라진 백신 접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등 돌린 골퍼들의 마음을 되돌릴 절체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515만 명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지 않도록 '무늬만 대중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중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파산 위기 몰린 농가 땅 되팔아 이익 남겨서야

전남 지역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원래 판 농지 값보다 340억 원을 더 주고 되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농어촌공사가 340억 원의 환매차익을 남겼다는 말이 된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거둬들인 환매 차익은 1698억 원에 달했다.

전남의 농가들은 같은 기간 총 2220억 7400만 원에 농지를 팔았지만 되산 때는 340억 7500만 원(15.3%) 비싼 2561억 49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전체 환매차익의 5분의 1가량으로 9개 도(道)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농민들이 다시 농

가 가격으로 농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임대료와 이자율 때문이다. 농민은 공사에 농지를 판 뒤 농지 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 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결국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를 더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 부담은 지역 농협의 농지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다른 농업 부분의 정책 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개호 의원의 지적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약 주고 병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임대료와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폐기물 점검 손 놓고 있는 이유 뭔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현장 지도 관리 및 점검 실적이 전국 환경청 중 가장 저조한 곳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유·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 폐기물과 달리 적정 처리에 대한 관리·감시 의무가 국가에 있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9년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226곳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22곳만 점검해 점검률이 9.7%에 불과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7개 환경청 평균(38%)에 비해 훨씬 저조한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계획보다 더 많은 업체를 점검(106%)한 곳도 있었다. (이상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문제는 점검률이 낮다 보니 어떤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한 것인지 알 수 없

다는 점이다.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8년에도 점검률이 46%에 머물러 7개 환경청 평균 46.7%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청은 네 명에 불과한 지정 폐기물 관련 부서 직원들이 허가와 점검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소화했다 보니 점검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환경청들도 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지 부족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정 폐기물 발생·운반·보관·처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하면 환경 피해는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도 어려워진다. 더욱이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세금 투입도 불가피하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산강청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항우연) 영상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진은 1.5초 로켓 엔진이들은 2016년 5월 3일을 '액체'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부른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75t급 엔진에 처음으로 1.5초 동안 불을 붙인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1.5초간의 연소시험에 성공, 우주발사체 엔진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엔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항우연이 지난 10일 유튜브 'KARI TV'에 올린 누리호 엔진 제작 관련 영상은 16만3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75t에 관련된 모든 기술과 설계나 제작 그리고 조립·시험에 관련된 것을 순수 국내기술 즉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항우연 한영민 엔진개발부장의 말이다. 연구진은 1.5초 연소시험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겪었다. 로켓 몸체와 추진제 수송 시스템 사이의 공진 문제와 연소 불안정 현상 등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또한 국내에 엔진 연소시험 설비가 없어 외국 설비를 빌려 쓰러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3단 된 것을 순수 국내기술 즉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항우연 한영민 엔진개발부장의 말이다. 연구진은 1.5초 연소시험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겪었다. 로켓 몸체와 추진제 수송 시스템 사이의 공진 문제와 연소 불안정 현상 등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또한 국내에 엔진 연소시험 설비가 없어 외국 설비를 빌려 쓰러다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